

특 집

북한의 정치변동과 군부의 정치적기능

I. 서 론

이기택(李基鐸)

본 논문은 「김일성 이후」 북한의 정치변동과 군부의 정치적 기능, 혹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군부의 역할과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정치변동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김일성 이후」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은 시간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과 군부와의 연계를 단순히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보다 분석적이며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인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동시에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군부의 기능과 역할을 논하려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예측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 그 자체가 이미 예측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때에, 북한 군부의 기능에 대한 가까운 미래의 예측적인 분석 또한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김일성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권력체계가 분명하게 그 윤곽 조차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문제이었다.

북한은 이미 1972-3년부터 「김정일체제」를 후계체제로 그 윤곽을 잡아 왔으나, 김일성이라는 「정치지도자」(Statesman)를 대신하는, 김정일이라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정치인격(Personality)

연세대 정외과 졸업.

佛 파리대학

La Sorbonne

대학수로, 박사.

현재 연세대 정외과 교수.

최근 논문:북의 통일정책

한국정책의 연장이다.

한국논단 1993.

조차도 확립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혹 김정일이 형식적인 지위 즉 국가주석이라던가 총서기직에 취임한다 하여도 북한의 체제적인 상황은 변함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얼굴없는 국가」인 것이다.

본 연구는 1945년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이라는 정치인격(Personality)이 쌓아놓은 북한의 체제 형성과 그 결과가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 오늘날 문제의 초점이 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새로운 정치지도자(Statesman)가 나오더라도 김일성이 쌓아놓은 체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정치지도 그 자체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단지 본 논문에서 김일성이 쌓아놓은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를 누가 수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분석하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로서는 김일성의 「깃발」(정치논리) 밖에 없다. 당분간 김일성의 「깃발」을 내려놓거나 이를 대신하는 깃발을 올릴 정치 세력은 없다. 이는 체제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이라는 개인적인 정치인격이 50년간 쌓아놓은 북한의 체제는 오늘의 국제환경이나 한반도의 정치환경에서 엄격한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새로운 정치변동 없이는 북한은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적인 논리로 보아 북한은 필수적으로 「김일성의 체제적 모순」을 해결해야할 전환점에 이른 것이다. 체제적인 모순을 해결할 북한의 정치세력은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분리」되는 「군부」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본 논문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김일성의 정치인격과 군사인격의 교환성이 과거에는 완벽하였다. 「빨치산체제」라는 구상과 체제에서 기인했던 북한체제는 실제에 있어서 당과 군부간의 인사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거의 대부분 당의 정치국과 군부 사이에 인사의 교환성이 존재하는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에는 정치와 분리되는 개념으로서의 서구적인 「군부」라는 개념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에서도 서서히 북한 군부의 구성원들이 군부로서의 「자아인식」을 하면서, 당과 분리

되는 「군부」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가리라 전망하면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군부와 대칭적인 공산당체계의 본질인 「공산당의 지도」라는 정치개념에서, 즉 노동당이라는 정치체계에서 군부라는 개념의 「분리」가 앞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군부와는 달리 북한노동당은 「죽벌체제」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군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소련 유학파라는 성격에서 보듯이, 군부엘리트는 반드시 죽벌체제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당의 죽벌체제와는 대칭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과 군부라는 범주를 전제하고 북한의 정치변동을 살펴보았다. 물론 보다 중요한 분석의 초점은 북한의 군부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끝으로, 북한의 군부에 대한 자료 부족은 알려져 있다. 이에, 분석의 자료는 가능한 한 수집할 수 있는 범위 한도내에서 국가간의 전략 정보 혹은 첩보 차원의 자료까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자료를 원용하면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때로는 각주를 생략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사실상 북한 연구 자료중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북한 군사 자료이며,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관련 자료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 완성된 자료가 적으며 단편적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를 보완, 확대하면서 논리를 전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역으로 북한 연구에 있어서 분석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이 동시에 중요한 것이다. 북한의 정치변동이나 이와 관련하는 군부의 개념의 정리나 북한 현실에 맞는 논리의 틀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본 논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북한 정치체제의 모순과 정치변동

북한의 정치변동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이전」의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김일성의 정치가로서의 「정치인격」(Personality)이었다.¹⁾ 김일성이라는 정치인격 개인이 체

제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형성은 철저한 「피의 숙청」과 김일성 개인의 「현지도」라는 공산당의 「당의 지도」²⁾를 대신하는 정치조작을 통하여 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며 형성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김일성 이후」라는 관점에서는 김일성이 50년간 형성시켜왔고 완성시켜 온 「체제」(System)가 문제되는 것이며, 「정치인격」(Personality)이라는 관점이나 「정치지도자」(Statesman)라는 관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김일성 이전」에는 체제형성 과정에서 김일성의 정치지도자로서의 「개성」(Perosnality)이 중요하였으나, 「김일성 이후」부터는 김일성을 대신하게 될 정치지도자(Statesman)나 정치지도자의 「개성」(Personality)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Political System)가 우선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변화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체제」로부터 어떤 「체제」로 이행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는 북한의 정치변동의 중요한 명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체제적인 변동이 불가피한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을 어떻게 누가 변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중요한 북한 정치변동의 향후의 지표가 된다고 본다. 북한의 정치변동을 예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치변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 국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을 경

1)이기택 역, 『국제정치사이론』, (서울:박영사, 1987), 제2편 정치가와 정치지도자 참조.

2) '공산당체제에서 「당과 군부」라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사회분야를 당이 「지도」한다'는 규범이다. 당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체육 모든 분야의 생활에 간여할 수 있다는 정치원칙인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현지도」라는 개인적인 지도가 곧 노동당의 「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지도」 대신 김일성의 「현지도」 즉 직접적인 개인적인 「지도」가 이를 대신한 것이었다.

우 북한은 체제적인 「위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 때문에 「해체국가」(Failed State)³⁾의 길을 가야할 수 밖에 없다. 북한에게 있어서 체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의 특징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적인 체제(Power System)의 모순이다. 북한의 권력은 1945년 이래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반미」와 「미제국주의」라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고 편성되어 왔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남한은 일차적인 적이 아니며 「미제」가 일차적인 적으로 되어있다. 권력체제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대내정치를 역시 「반미」와 「미제」라는 정치슬로건을 기초로 하여 조작하여 온 것이다.⁴⁾

그러나 고르바초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가 형성되면서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인 것이다. 세계질서를 가늠하는 국제정치상의 주역이 미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권력체제상의 모순이 야기된 것이다. 「미제」와 「반미」사상을 기초로 하여 형성시켜 온 북한의 정치체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와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상 북한의 핵전략과 핵군사정책에서 기인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위기」에서 보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와 북한의 대내권력체제간의 모순은 북한 권력체제의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⁵⁾

김일성과 카터 대통령과의 「대동강 회담」은 북한의 권력체제상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대동강 회담」에서

3) 「해체국가」(Failed State)라는 말은 고르바초프 이후 소련의 몰락 이후 소연방을 포함하는 동독 나아가서 최근에는 특히 「유고형」의 동서독의 통합적인 성격과는 달리 「해체」(Failed)되어 가는 국가군을 말한다.

4) 북한의 반미사상과 미제사상은 철저한 것이다.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북한 사회 모든 부문에 반미사상과 미제라는 구호가 침투되어 있다.

5) 북한이 이러한 권력체제상의 모순을 부분적으로 극복하려 한 것이 카터 대통령과 김일성간의 「대동강 회담」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의 김일성의 주된 목적은 「반미」라는 「깃발」을 내려놓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국제질서」(New World Order)와 타협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권력체제의 보장을 끌어내려는 것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김일성의 정치 명제에 가장 저항할 수 있는 북한의 권력적인 요인은 물론 북한의 「군부」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김일성은 사망 직전 북한의 정치변화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는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토의 과정에서는 김일성의 설득에 불구하고 군부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둘째로는 경제적 체제(Economic System)의 모순이다. 김일성은 특히 한국전쟁 직후부터 철저한 「중공업우선주의」를 경제체제의 내용으로 하여 경제정책을 진행시켰다. 이는 물론 전쟁정책을 기초로 하는 중공업우선주의였으며, 경공업과 농업의 무시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군수형으로 형성시킨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의 완성이나 「노동1호」 또는 「대포동」계의 핵운반수단의 완성 등을 볼 때, 북한의 경제체제는 철저한 군수형의 「중공업우선주의」라는 경제 목적을 갖고 이를 형성시킨 것이다.

그러나, 역시 고르바초프 이후 소련의 몰락 또는 탈냉전 이후 시기에 세계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System)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문제의 본질도 남북한이 시장경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로 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군수형의 중공업우선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과연 「시장경제」(Market System)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북한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과 한반도 전체를 위요하는 동북아시아에도 시장경제 질서가 깊이 침투되고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북한의 경제와 북한 군부간의 문제가 제기된다.

6) 김일성의 사망 직전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김일성 스스로가 경제개혁이나 개방의 중요성을 2차에 걸쳐 설득하였으나, 설득 연설 후 의견 제시에서 군부측이 완강히 저항을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계획 경제이며 동시에 배급제도를 기초로 하여 경제체제가 형성되어온 것이다. 북한의 군수형의 경제체제는 실재에 있어서 군수산업을 주로하는 경제체제인 것이다. 사실상 군부가 군수산업체제를 총괄하고 있다. 휴전 이후 「중공업우선주의」라는 경제체제 그 자체가 군사경제의 특징이며, 이는 군부 중심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은 두가지 차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하나는 과연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체제가 대내적인 수정과 개혁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급되는 「자유시장경제」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거의 절망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원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군수경제체제를 군부가 쉽게 이에 대한 개혁에 수정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군부의 속성상 북한이 지금까지 형성시켜온 「하나의 조선」정책을 뒷받침할 군사정책을 수정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경제개혁에 대한 군부의 양보가 문제된다고 본다.

셋째로는 군사체제의 모순이다. 북한 군사체제의 최대의 모순과 본질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핵군사정책 문제이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확실히 「핵억지력」(Nuclear Deterrence)체제로부터 「핵확산금지」(Nuclear Non-Proliferation)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NPT체제는 1995년 3월을 전환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군사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인 핵개발 정책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면을 형성시킨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은 실재에 있어서 대한반도정책이 아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정책」(Weltpolitik)인 것이다. 실제로 한미공조체제라는 것은 초기부터 성립할 수 없는 외교협력이었다. 한국의 대북한 핵정책과 미국의 대북한 핵군사정책에 대한 입장은 외교행위 기원에서부터 분기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한 핵군사정책을 저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을 상실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군사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있어서 북한 핵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한국에게 있어서는 이는 본질적으로 「군사력」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결국 협상과 중간적인 타결을 「과거의 핵」에 대하여는 일단 적어도 「부차적인」(Making it secondary) 것으로 접어두고, 북한핵의 「현재의 핵문제」와 「장차의 핵문제」만을 거론하는 외교 형식으로 후퇴한 이유도 한미간의 문제점의 외교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1)세계문제이며, 2)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1)한반도문제라는 지역문제이며, 2)철저한 군사문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간의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인식과 견해의 차이를 낳게할 것이며 많은 문제점을 낳게할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세계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보게될 것이며,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문제되는 것은 북한의 핵군사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군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군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이다. 정책으로나 기술적으로 군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과 앞으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군부의 역할이 긴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 핵정책에 들어서서도 군부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군사정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북한의 군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직도 한반도문제나 남북한관계라는 문제의 본질은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군사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최후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특히 소련의 몰락 이후 정치적 보장을 하기 위한국가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체제옹호정책은 정면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즉 NPT체제와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북한의 군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체제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권력체제의 변동이나 북한 국내정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는 사회체제의 모순이다. 냉전하에서의 동서간의 사회적인 대립과 대항은 주로 사회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방은 주로 사회적인 「개방사회」(Open Society)를 기초로 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권은 철저하게 「폐쇄사회」(Closed Society)를 기초로 하여 대항하여 온 것이다. 이는 사회체제적으로 사회주의의 「폐쇄체제」와 서방의 「개방체제」간의 대항이었던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체제의 붕괴에서 보듯이 「개방체제」 혹은 「개방사회」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물론 「개방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체제라는 정치제도 보다는 사회제도와 관련하는 「시장경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독일의 통합과 통일 과정은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시발하였다. 동독의 주민들이 「폐쇄사회」의 상징인 「국경」을 발로 걸어 넘어서게 되면서 동독이 붕괴과정을 밟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나 서독의 동독 흡수통합은 결과적으로 「폐쇄사회」로부터 「개방사회」로의 이행이었던 것이다.

북한사회는 철저하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폐쇄사회를 구성하여 왔다. 「폐쇄사회」를 기초로 하여 그 상층부에 권력, 경제, 정치심리, 기술 및 대내의 정치조작 등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철저한 국경의 폐쇄와 대내적으로 지역적인 폐쇄를 통하여 북한사회를 통제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하에서 세계는 「개방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개방사회」의 필수적인 조건은 세계시장에 대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채택과 적응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폐쇄성은 체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회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할 경우 북한사회의 폐쇄 위에 구축하여온 권력, 정치, 경제, 군사, 정치심리, 기술 등의 상층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제로 인해 북한사회를 개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개방은 곧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체제가 개방사회로의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사회의 체제적인 폐쇄라는 문제와의 모순과 대립은 앞으로 북한사회의 절대적인 사회적인 체제적 모순을 낳게할 것임은 말할 필요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는 군부와의 관계는 북한의 폐쇄성의 본질은 권력과 군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적인 체제적인 개방에서 가장 어려운 저항 세력은 아마도 군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북한의 군사체제는 핵군사정책에서 보듯이 엄격한 폐쇄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핵군사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사회의개방은 북한의 군부의 목인이나 허용없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동시에 북한의 군부가 사회적인 개방과 관련할 때는 반드시 군부가 주관하고 있는 핵군사정책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는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와 관련하는 국제체제상의 모순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와 고르바초프현상 이후의 세계체제의 변화로 북한의 「국제적 지위」(Status)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요를 받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국제적 지위라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Proletariat Internationalism)이라는 국제적 지위 위에 유지되어 왔다. 북한의 정치적 지위의 기원은 실제에 있어서 구소련이 주도하여온 「국제공산당」이 그 기원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국가체제의 기원이었으며 체제적인 기원이었던 「국제공산당」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이나, 국제적인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이라는 원칙을 뒷받침하던 소련의 몰락은 북한의 국제적 지위에 거의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왔다.

사실상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뒷받침하던 소련과 중국이 각각 몰락과 변질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그 기저에서부터 상실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북한은 완벽한 「고립국가」라는 개념과 실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새로운 국제질서」(New World Order)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위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핵군사정책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구사하여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협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인 체제를 보장 받는다는 외교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북한 군부의 동태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핵정책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군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일성 없는 북한」이라는 김일성 이후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군부의 핵군사정책에 대한 외교적인 타협점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카터간의 「대동강 회담」은 실재에 있어서 북한의 한반도문제 전체를 전제한 「대미접근정책」의 대협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동강 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반미정책」으로부터 친미정책으로의 전환은 아니나 「대미접근정책」으로의 전환은 확실한 것이었다.⁷⁾

북한 군사의 가상적은 항상 「미제국주의」였으며 남한이 일차적인 적이 아니라는 관점과 일관된 정책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대미접근정책을 통한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체제의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불가피성에 불구하고 북한 군부의 기존 대미인식에 따른 저항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Ⅲ. 북한의 당과 군부

1. 북한의 정치변동 요인

북한의 정치변동의 요인은 북한 내부로만 국한할 때에는 「당」과 「군부」라는 두가지 확연한 요인 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에 있어서는 북한

7) 「대동강 회담」 직전에 김일성이 주최한 인민대회에서 김일성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직후 이에 대한 의견과 반응을 요청하였을 시에도 가장 강한 저항은 군부로부터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의 체제적인 특징을 볼 때에는 당과 군부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군의 통합적인 정치인격을 상징화하였던 김일성 이후부터는 군부와 당과의 구분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과 군부의 분리는 더욱 확연하게 구분되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동독과 같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독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탈린니즘의 정치적 영향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문명에서 기인하는 「시민사회」가 잔존하였으며, 동독의 해체는 서독이라기 보다는 시민사회에 바탕한 정치세력을 통해 동독을 「안으로부터」 붕괴시켜 나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였으나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 아니다. 동독내의 시민사회적인 단체들이 「새로운 포럼」(New Forum) 등의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력독점 포기를 요구하면서 동독을 붕괴시켜 나간 것이다. 또 하나의 현상은 「대탈출」(Exodus)였다고 할 수 있다. 동독국민들이 동독 국경 밖으로 탈출함으로써 동독을 붕괴시켰다는 점이다.⁸⁾ 동독은 안으로부터의 저항적인 반란과 국경 밖으로의 대탈출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붕괴된 것이다. 즉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였다는 것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타당하나, 실제로 있어서는 역으로 「흡수」라기 보다는 동독의 시민사회의 저항과 탈출로 동독이 붕괴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에는 동독과 같은 서구문명의 잔재로서 같은 수준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것은 없다. 북한의 대내적인 사회적 특성으로써 북한은 1945년 이전에는 식민지로서 식민지사회가 지배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소련의 식민지 지배와 못지않은 「스탈린주의」의 사회가 식민지 사회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의 북한사회의 중산층이나 지식층 기독교인들이 1945년 이래

8) 이기택, 『국제정치사』 (서울:일신사, 1993), pp. 583-586 참조.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중 상당한 수가 남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는 비근한 시민사회라는 성격은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은 폐쇄를 강화시키면서, 완벽하고도 철저한 계급사회를 형성시킨 것이다.

정치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동독사회와 북한사회를 비교하면 대조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동독은 서구문명의 잔재로서 「시민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북한사회는 식민지사회로부터 스탈린주의사회로 이행하여 철저하게 비시민사회적인 성격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그나마의 잔류하였던 상당수의 중산층이 남하함으로써, 북한은 이를 계기로 하여 철저한 「계급사회」로 이행하였다는 점이 북한사회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이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재촉할 수 있는 요인은 노동당이라는 「당」과 북한사회를 실질화하고 있는 「군사사회」의 기초인 「군부」만이 남게된다고 본다.

실질상 「김일성 이후」 「군부」의 정책결정 참여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은 휴전선을 넘은 「헬리콥터사건」⁹⁾을 중심한 미국과 북한간의 과정에서 잘 파악되기 시작되고 있다.

2. 북한의 「당」(노동당)과 족벌적 성격

북한의 노동당의 당적인 성격은 「족벌체제」라는 특징이다. 실제에 있어서 북한의 노동당은 「당의 지도」라는 강력한 권력적이며 조직상 지도력은 말할 필요없으나, 이보다 중요한 당의 성격은 당이 김일성 일가와 직계 또는 존속으로 연결되는 친척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당 혹은 당과 관련되는 친척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¹⁰⁾

김일성: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 주석), 노동당 총비서, 당중앙정치

9) 『중앙일보』, 1994년 12월 21일자. 헬리콥터 월경사건이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과 군사문제가기도 하나, 「군부」의 큰 반발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도 「군부」의 강한 발언권이 문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 상임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군사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위국 방위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대원수.

김정일(김일성의 장남, 전처 김정숙의 아들): 정치국 상무위원, 동정 치국 위원, 비서국장, 당중앙위군사위원회 주석위원, 중앙인민위국방 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김정남(손자, 김정일의 장남, 71년생으로 21세로 알려졌다으나 19세 라는 설도 있음): 직업불명.

김성일(미확인, 2남, 김정일과 배다른 형제, 현처 김성애 전의 처의 소생으로 알려짐): 인민군참모부 부부장과와 설도 있으나 확인 안됨.

김성애(처): 여성동맹중앙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의원.

김평일(삼남, 김정일과는 배다른 형제): 불가리아 대사, 인민군 중장.

김영일(사남, 김정일과 배다른 형제): 직업 불명.

김경희(장녀, 김정일과 같은 어머니): 당경공업부장

장성택(김경희의 남편): 당근로단체사업부장(실질적으로 직맹, 농노 맹, 사로청을 통괄), 당삼대혁명소조사업부장, 노동영웅별호.

김경진(차녀, 김성희의 딸): 前체코주재 대사관참사관 (90년 9월 해임)

김광섭(차녀 김경진의 남편): 前체코슬로바키아대사 (90년 9월 해임)

양형섭(전처 고김정숙의 매, 고김신숙의 남편): 최고인민회의의장,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장, 사회과학원장, 김일성방송대학학장, 조국통 일민주주의전선의장, 조국평화통일위부위원장, 조선의회쿨바위원장, 조영친선위원장.

김정숙(종매 숙부 김형직의 딸): 민주조선지 책임주필(편집장), 직업 총동맹부위원장,

김정주(종형제 숙부 김형직의 아들):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 위원회위원.

김봉주(종형제 숙부 김형직의 아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장, 당

10) Radio pres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직별 인명부』 (동경:1994년); 세계정경조사회 편, 『북조선인명사전』 (동경:1992년); 세계정경조사회 편, 『한국.북조선요람』 (동경:1994년); 고준석, 『김일성체제의 형성과 위기』 (동경:1993년)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

부부장,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위원장.

강성산(이종 사촌):당정치국위원, 함경북도당책임비서겸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원.

황장엽(사위):당비서, 조국평화통일위부위원장, 조선평화보호전국민족위위원장인민상수여위부위원장, 국가학위학직수여위부위원장, 사회과학자협회위원장, 철학박사.

강현수(종제, 숙부 강용석의 아들):황해북도당책임비서겸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법안심의위원회, 중앙검관위원회 제1부위원장, 중앙인민위원, 인민군 준장.

강희원(외숙의 종제):부총리, 당정치국위원후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

강석송(모계 외숙):당역사연구소장, 적십자 자문위원, 조중친선협회사무위원.

박성철(외숙 강량익의 사위):당정치국위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 노동영웅 칭호.

김중린(김영주의 처의 인숙):당비서, 당통일전선부장, 최고인민회의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

이용무(조모 이보익의 외숙계 생질):교통위원장, 상장.

김용순(전처 김정숙의 제):당비서 당국제부장, 중앙인민위외교위원장.

김달현(조카):부총리, 대외경제위원장, 무역부장.

강영섭(외숙 강량익의 아들):통일정책심의위원회위원, 조선크리스트교도연맹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부회장.

강덕수(종제 숙부 강보석의 아들):조선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강린수(종제 숙부 강보석의 아들):화학공업부부장

김명호(조카):인민군사단부장 소장

김정우(종제):대외경제협력사업부부부장,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장성주(장녀의 남편 장성택의 친형):사회안전부정치부장, 인민군 대장.

김영주(친동생):전당조직지도부장, 전정무원 부총리, 전남북조절위원회북측위원장 73년 이후 행방불명, 김일성의 후계자로 나서다 김정일에게 제거됨.

김광협(처 김성애의 형):전민족보위상, 전인민군총참모장, 인민군 대장, 전부수상, 전당중앙위원장, 전당비서,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 70년에 경제, 국방정책을 비판하다 숙청됨, 웅기의 정유공장 지배인 설이 있음.

김성갑(처 김성애의 동생):74년 3월 해군사령부정치위원을 최후로 소식 불명.

장정상(사위):전 인민무력부부부장, 인민군중장, 최고인민회의 제5기의원, 79년 12월 당중앙위원후보로 보선, 이후 불명, 숙청?.

김동왜(인숙):전부주석, 전당중앙위원겸당비서, 77년 가을 이후 불명, 80년 10월의 당대회에서 숙청 확인.

김병하(사위):전사회안전부장, 정치보위부장, 당중앙위원, 84년 2월 정치보위부장 해임, 제7차 내각때 숙청된 것으로 관측.

이 이외에 최근 사망한 허담과 김신숙 등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3. 북한의 족벌의 분류

북한의 족벌체제에는 세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북한의 족벌체제에는 첫째, 김일성 직계에 속하는 친척 부류이다. 둘째로는 김일성 가계와 직계는 아니나 방계에 속하는 친척류이다. 셋째로는 북한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기관, 당, 국가, 군, 경제 각 분야에서의 「간부」 등을 포함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의 「족벌체제」의 부류인 것이다.

첫째, 김일성 가계의 직계에 속하는 족벌체제는 강력한 권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상기표에서 보듯이 권력의 중심부는 김일성 가계의 친척들이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권력의 핵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이 그 중심점이 되고 있으며, 역시 김일성 가계를 중심하여 현재까지 편성되는 권력체계에서는 족벌체제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다.

도리어 장성택(김경희의 남편)의 지위 변화에서 보듯이 권력이 보다 강화되는 족벌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는 아마도 김일성 이후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재편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일성 가계와 방계적인 친척그룹이다. 김일성 직계를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방계 친척층이다. 방계라고 하나 역시 김일성 가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권력의 핵심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류를 말한다. 직계와 방계의 구분은 아마도 숙청과 관련한다고 본다. 김일성은 직계 친척에게 한하여는 가혹한 숙청이라는 것은 드문일이었다. 물론 한국 전쟁 직후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숙청을 가한 예는 있다.¹¹⁾ 물론 북한의 숙청이라고 할 때에는 사형도 포함되는 것이다. 영원한 퇴장을 의미한다.

군사반란(일시 미상)시에도 15명의 군관들이 처형되었으나, 강윤명(인민군 대좌)과 김일 손자(대좌급)만은 살아 남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경대 당비서였던 강영룡의母는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처형된 것이 그 역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족벌체제의 부류는 김일성 가계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북한의 중앙과 지방, 당과 정부, 군, 경제기구 등의 핵심간부 가족과 관련하는 족벌체제다. 이들 가족을 포함하여 300만에서 500만이라고 알려져 있다. 인구비례로서는 엄청난 족벌체제의 수적인 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김일성 가계 중심의 통일정책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족벌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족벌체제층의 사활의 이해가 걸리는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김일성의 족벌체제를 배제하고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는 다른 세력에 권력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족벌체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들 북한 조직의 족벌층은 통일 후의 구동독의 당이나 국가기관 안전기관의 직원 또는 군인 외교관들의 운명을 잘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빠지는 것에 깊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격은 폐쇄사회의 성격에 불구하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일가의 몰락과정은 북한의 족벌체제에 줄 충격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하고 있다.

11) 강영룡(전만경대 당비서)의 모가 체제적인 불만을 한다하여 처형하였다.

12) 고준석, 『김일성체제의 형성과 위기』(동경:1993년), p. 244.

북한사회 내부에 있어서 이러한 족벌체제와 대립되는 사회계층으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산가족층에 속하는 500만의 인민이다. 이들 이산가족체제를 남한과 합할 때에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수자가 된다. 북한의 족벌체제와 반대되는 가족체제인 것이다.

4. 북한의 족벌체제와 권력투쟁

「김일성 이후」와 정치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심적인 족벌체제의 중요성은 권력투쟁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족벌체제내에서의 권력투쟁의 형태는 김일성과 카터 대통령과의 회담이 그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동강 회담」에 우선 김성애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김일성의 정치회담에 동반하였다. 같은 시기에 1970년 초 후퇴하였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정치 전면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동시에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이 대사직을 떠나 장기간 김일성의 업무에 봉사하였다는 점이다.¹³⁾

김일성의 족벌체제내에서의 권력관계를 보면 단연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대동강 회담」의 형식은 권력적인 의미에서 그 성격이 판이하였다. 김성애는 위의 회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실종자의 유해를 미국이 직접 북한내에서 찾는 활동을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도 김성애이었다. 김일성은 주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⁴⁾ 사실상 김성애나 김영주나 김평일은 실체에 있어서 김정일의 정치적인 적인 것이다. 특히 김성애는 김정일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강 회담」의 중요성은 핵문제라는 중요성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북한의 대미정책의 대폭

13) 일본 전수상 미끼다케오의 부인이 평양을 방문하였을시 김성애와의 대화에서 김평일이 김일성 곁에 있어서 주석이 마음 편해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짐. 김평일이 약 3개월간 김일성 측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14) 카터 전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에 전하는 것으로는 미군 유해 수색문제에 김정일이 크게 반발하였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적인 전환을 전제로 하는 김일성의 「대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있어 김정일의 직접적인 참여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김성애의 협상 개입은 중요한 변화였다. 따라서 당연히 김정일의 권력적인 입장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성격의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족벌체제내의 권력투쟁의 하나의 북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김일성의 사망을 낳게하는 북한의 족벌적 분위기는 확실히 김일성 스스로를 과로케한 권력투쟁과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투쟁의 형태나 발단은 북한내부 족벌체제에서 기원할 수 있다고 본다. 「대동강 회담」이 그 하나의 형태이며, 북한 권력투쟁의 대표적인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북한의 군부와 그 성격

(1) 북한의 당과 군의 인사의 교환성

북한사회에 있어서 서방이 사용하던 「군부」라는 용어는 실제에 있어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김일성의 군사인격이나 정치인격의 완벽한 교환성에서 보듯이 과거에 있어 북한은 군부와 당간에는 거의 완벽한 인사의 교환성이 있었다.

이제부터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빨치산 1세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던 당과 군부간의 인사의 교환성은 점차로 그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당과 군부간의 「분리」가 점차로 야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물론 김정일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정치인격이나 군사인격의 특성에서 나타난다. 물론 김정일은 군사조직상 국방위원회위원장이 라던가 원수라는 군사 명칭과 자격을 갖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군사력의 상징인 인민군에 군사적인 활동에 깊이 관여한 일이 없다. 문헌상으로는 김정일이 「군사 천재」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인민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¹⁶⁾

15) 실제로 「대동강 회담」을 중심으로 김정일과 김일성간의 권력적인 갈등을 야기시켰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권력적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미지수이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당과 군부간의 인사의 전면적인 교환성은 앞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당」과 「군부」의 분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노동당의 「족벌적」인 성격에서 핵을 관리하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조직적인 「군부」와의 관계는 「분리 작용」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¹⁷⁾

(2) 북한 군부엘리트의 성격과 특성

북한 군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군부 엘리트의 「교육의 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엘리트들은 대개가 구소련의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정규모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군사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군과 대조적인 점이다. 한국군에는 외국의 정규사관학교를 정규모 졸업한 예는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군의 엘리트는 대개가 미국에서 새로 도입되는 신무기라던가 특수작전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온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부엘리트들은 대개가 주로 구소련의 군사관학교에서 단순한 「훈련」이 아닌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 대조적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만명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북한 군부엘리트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군부의 특성은 「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따라서 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 핵무기나 연구를 군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군부엘리트의 지적인 성격은 충분하다.

16)일반적으로는 김일성은 잠시 김일성의 호위실에 복무할 시에 군인 견장을 단 경험 이 외에는 거의 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북한의 당과 군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필자의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서울:일신사, 1988), pp. 334-357 참조.

18)한국전쟁중에도 군엘리트들을 꾸준히 해외에 유학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구소련에서의 군사교육, 러시아의 군사전통을 그대로 전수받은 소련의 군사관학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방의 군사관학교와 교육내용이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엘리트의 교육은 서방적인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훈련」을 받은 한국 군부의 엘리트와는 대조적인 측면이 된다.

둘째, 당연한 것이긴 하나 북한 군부는 강한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서 가장 조직적인 정치집단이 군부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북한사회 그 자체가 군사화가 진행되어온 것이다. 북한사회의 정치구호나 대중조직은 거의가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100일 투쟁」이라던가 하는 것이 북한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정치조직의 일환인 것이다.

셋째, 북한 군부는 군사수단과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문제이긴 하나 「권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다. 북한이 군사사회라는 특징이나 북한의 기본정책이 「하나의 조선」정책이라는 대남정책의 군사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문제에서, 군부의 권력적인 특징은 불가피하게 중심적인 것이다. 북한의 사회적 구성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부는 절대적인 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군은 「당의 무장력」이라는 데서 보듯이 기본적인 북한 권력의 중추인 것이다.

넷째, 북한 군부의 특징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특징이다. 북한 군부의 엘리트 구성원이 모스크바나 동유럽 등지에서 정규적인 서구적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군엘리트 그 자체가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북한의 사회적인 성격인 철저한 폐쇄사회라는 성격속에서 군엘리트들은 국제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모스크바라던가 동유럽은 실체에 있어서 서구적인 교육적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인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이나 군사고문단의 해외파견 등은 특히 제3세계에 널리 파급되어 있다.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수출을 통하여 중동지역에 대한 강한 국제적인 유대를 냉전에서의 제3세계를 대신하여 강화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군부는 군사외교라는 각도에서 많은 제3세계 영역에 군사고문단 혹은 직접적인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것 또는 테러 훈련에 활동을 확대해온 것이다. 북한의 군부는 국제적인 성격과 특징을 띠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Ⅳ. 북한의 정치변동과 당 군의 권력적 변동

1. 북한의 정치변동과 당의 역할과 문제점

앞으로의 북한의 권력투쟁과 전개에 있어서나 정치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는 권력적 요인은 당과 분리될 수 있는 「군부」와 족벌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당」 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논하였듯이 북한에는 동독의 정치변동을 야기시켰던 「시민사회」(Civic Society)라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 북한사회는 식민사회로부터 다시 1945년이래는 스탈린주의형의 사회로 곧 전환되었으며,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사회는 김일성주의를 기초로 하는 완벽한 폐쇄사회를 구축하면서 「계급사회」를 철저히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을 고찰하려 할 때에는 북한 정치변동의 기본 요인인 「군부」와 「당」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첫째, 당은 철저한 족벌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권력투쟁에 있어 강점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약점이라고 평가된다. 즉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노동당이 족벌체제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은 오늘의 북한사회에서 최대의 강점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최대의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사의 역사적 전통은 권력투쟁에서 족벌적으로 패배할 경우 반드시 붕괴되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조선 500년의 정치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의 전통은 해방 이후의 한국의 정치사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조선 500년의 정치사의

전통에서 「귀양」이라던가, 「사약」을 내리는 정치적 형식이라던가, 「5족을 멸」하는 정치적 특징과 관습은 4공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는 정치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도 다만 스탈린적인 「숙청」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정치사의 특징인 「귀양」, 「사약」을 내리는 일, 「5족을 멸」하는 일을 대신하였을 뿐이다.

김일성의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책임을 물어 남로당 일파를 숙청한 것이나, 다시 중공업우선주의라는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정책을 구실로 소련과 내지는 연안파를 숙청한 정치적 패턴은 한국정치사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북한의 족벌적으로 조직되고 집합된 노동당은 족벌적인 조직 그 자체의 약점으로 정치변동의 주역이 되기에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당의 족벌적인 집중력이 이미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김정일이라는 정치인격을 갖고서는 족벌통치라는 그 자체의 권력적인 집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김정일의 정치인격(Personality)이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대신할 수 없다는 데서 더욱 노동당의 조직이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조직사회라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김정일이 모든 권력적인 자격을 합법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김정일의 건강이라는 개인적이며 사적인 문제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족벌체제에서 기인하는 당내부적인 권력투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내부의 족벌간에 권력투쟁이 조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 직전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1972년으로부터 권력의 핵심부분을 장악하여온 김정일에게 책임을 물어 이미 족벌간에 권력투쟁의 시발은 시작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이후의 북한 정치변동의 씨를 김일성 스스로가 심어놓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책임을 대신하는 권력적 대안이 김성애, 김영주, 그리고 김평일의 등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카리스마와는 달리 김정일의 정치인격을 갖고서는 북한사회를 지휘하기에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당적인 지도력이 북한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과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야 할 국면에 있다면 강력한 권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사회는 정치변동이라는 각도에서 대내외의 정치개혁 내지는 변혁적인 정책의 변화없이는 새로운 정치질서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이 과연 이러한 개혁적인 정책을 진척시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한국정치사의 전통에서 그러하듯이 북한의 정당정치의 실패와 북한노동당의 좌절은 김일성이 후계자의 선택과 양성에 전적으로 실패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2. 북한의 정치변동과 군의 역할과 기능

다음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문제되는 요인은 「군부」이다. 물론 「군부」가 앞으로 「당」과 어느 정도 「분리」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있으나, 「군부」는 중요한 정치변동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성격은 김일성의 정치 및 군사 관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한국전쟁에 대한 패전의 경험은 김일성의 정치인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은 공군의 약세로 제공권을 상실하면서 패전을 경험한 것이다. 「별오리 회의」¹⁹⁾에서 한국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공군력의 실패로 본 것이다.

김정일 후계의 육성과정은 한국전쟁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김일성이 김정일을 우선적으로 동독의 공군사관학교에 유학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물론 김정일의 동독 공군사관학교의 생활은 실패

19) 「별오리 회의」가 유일한 김일성의 한국전쟁에 대한 패전을 시인한 문헌이다. 공군력의 약점이 패전의 큰 이유 중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로 돌아갔다.²⁰⁾

이를 대신하는 것이 오극렬의 육성이었다. 김일성은 오극렬을 소련 공군사관학교에 유학시킨 것이다.²¹⁾ 김일성의 전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군엘리트로 육성된 것이다. 북한의 공군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구상과 발상에서 오극렬을 김정일의 실패 이후 대안으로 육성하여 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김일성의 후계자 육성의 기원과 「발상」이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군사적 발상」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 후계의 대안이 오극렬이었던 것이다.

김일성에 의한 오극렬 후계자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발상에서 후계자를 생각하였으며 이의 결과가 「오극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후계자 양성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구상과 발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군사적인 발상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김일성의 후계자 양성의 배경은 당이라기 보다는 오랜기간 동안 군의 양성이라는 범주에서 군사적인 발상을 갖고 후계자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클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인식 위에 북한의 정치변동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이점에서 「군부」라는 요인을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북한 군부의 정치적 동태 예측과 남한의 「5.16혁명」과의 비교

앞으로 북한의 군부의 동태에 대한 예측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참고

20) 1959년에 동독 공군사관학교에 유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중 중도 하차하였다. 김정일의 동독 공군사관학교 유학의 실패는 김정일이 동독 유학시 공군 교육 보다는 영화나 무대 예술에 보다 흥미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여자관계에 따른 동독정부의 개입으로 소환되었던 것이다.

21) 오극렬의 부친이 김일성 개인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입힌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오극렬의 3형제는 상당히 두뇌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의 비교는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군부를 예측하는 데에는 남한의 5.16군사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자료가 참고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군부의 정치적 기능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자료는 다른 아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인 자료라고 본다. 물론 이는 역사적인 국면에 있어 그 역의 경우가 된다. 북한의 역사적인 국면의 경우와 남한의 역사적인 국면의 경우는 상호 대칭적이며, 그 역의 경우가 된다는 의미이다.

남한의 「5.16 군사혁명」은 실체에 있어서나 역사적으로 그 「심층동인」에 있어 특이한 측면이 있다. 우선 박정희의 혁명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5.16혁명」의 근원적인 사상적 배경과 기본적인 출발은 냉전 상황에서 한반도문제를 「수정」해 보려하였던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한 특징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의 첫 대화가 5.16혁명 직후인 1961년 8월에 시작하였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1957년으로부터 1961년까지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의 정치담당관으로 있었던 바딤 트카첸코의 증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²²⁾ “남북한 당국자간의 최초의 대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972년이 아닌 1961년 8월에 비밀접촉이 시작되었으며, 3차에 걸친 회담 끝에 회담이 결렬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²³⁾ 1961년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극비회담이 개최된 것이다.²⁴⁾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15차에 걸친 비밀회담이 서해 용매도와

22) 『조선일보』, 1992년 6월 17일자 참조. 바딤 트카첸코는 1957년으로부터 1961년말까지 주북한 소련대사관의 정치담당관으로 있었으며, 소련공산당 중앙위 국제부부장으로 역임하고 연방 해체후 러시아국동문제연구소 한국과장으로 있으면서 쓴 논문이다.

23) 『조선일보』, 1992년 6월 17일자 참조. 이 비밀회담에 대하여 당시 북한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는 증언이다.

24) 『조선일보』, 1992년 6월 23일자 참조. 당시 5.16혁명의 주체였으며 특히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종필은 ‘정보부대 차원의 남북 비밀접촉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만 남북한간의 또다른 접촉일 수 있었던 황태성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해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북한이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으나 「좌익을 검거」하는 상황으로 바뀌자 결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⁶⁾ 바딤 트카첸코에 의하면 남한측이 제의한 의제로서는 4개항으로서 1) 서울과 평양에 상설 군사대표부를 설치하고, 2) 남북통상관계를 시작하며, 3) 시민들의 휴전선 자유통행보장과, 4) 우편물 교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⁷⁾ 5.16혁명의 초기 특징을 나타내는 대담한 협상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5.16군사혁명의 초기 특징을 보면 남북한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발하였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남북한관계의 상황은 「냉전」이라는 세계질서와 깊은 관련을 갖는 냉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이라도 하려는 듯이 남북한간의 대화를 시작하였었다는 점이다. 이는 확실히 냉전에 대한 「수정」을 한국의 입장에서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박정희의 「좌익적인 전력」과 5.16군사혁명의 군사적 배경과는 달리 정치 배경에는 진보성이 강한 정치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박정희의 정치지도자로서의 개성(Personality)도 나세르, 스카르노에 대한 관심이나 말년에 프랑스의 드골에 대한 관심 등에서 나타나듯이 「제3세계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6군사혁명의 정치구호인 초기의 「민족적 민주주의」, 「민족중흥」, 경제적인 「근대화」 등의 정치적 명제에서 보듯이 긴박한 냉전의 논리나 상황과는 달리 수정적인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의 「탈냉전」이라는 당시의 냉전의 상황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정」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25) 『조선일보』, 1992년 6월 21일자 참조. 당시 비밀회담에 참가하였던 김석순 등의 증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26) 『조선일보』, 1992년 6월 17일자 참조.

27) 『조선일보』, 1992년 6월 17일자 참조.

4. 북한 군부와 「하나의 조선」정책의 「수정」

북한 「군부」만이 북한이 「해체국가」(Failed State)로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군부만이 북한이 「해체국가」라는 상황으로부터 이를 피할 수 있는 대내상의 기본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당인 「로동당」은 실질적으로 족벌체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체국가」라는 북한의 체제적인 딜레마를 「수정」해야한다고 할 때, 족벌체제로 형성된 노동당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노동당이 「김일성의 깃발」을 내려놓고 새로운 깃발을 올릴 성향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북한이 「해체국가」라는 단계로 들어갈 때에 가장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북한의 「군부」이기 때문이다.²⁸⁾

박정희의 5.16혁명의 정치적 자료와 성격과 비교할 때에, 북한의 군부가 과연 「김일성 이후」라는 정치변동의 계기점에서 북한의 정치를 「수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시킬 수 있는 정치력은 상술하였듯이 북한의 「노동당」이라는 정치적 요인 보다는 도리어 「군부」가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군부와 관련하는 정치변동의 요인의 첫째 문제는 김일성의 권력의 논리인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의 조선」정책이라는것은 노동당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력과 정치논리다. 「하나의 조선」정책은 남한이 「미제」에 의해서 「강점」되고 있으며, 「착취」받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을 「해방」해야한다는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하나의 조선」정책은 1945년 이래의 김일성의 대남정책이라는 의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는 「남조선해방」을 전제하면

28) 1994년 12월 미군 헬기의 휴전선 월경사건을 계기로 하여,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다른 미국과의 협상에서 군부는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1994년 12월 21일자 참조.

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내정치에 작용하는 권력 논리인 것이다.²⁹⁾

북한의 군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선」정책의 강력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남조선을 해방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북한의 군사력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선」정책은 북한 군사력의 기본인 것이다. 북한 군부는 김일성의 「하나의 조선」정책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탈냉전 이후라는 소련의 소멸이나 동유럽의 붕괴과정에서 체제적 모순에 의해서 체제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북한의 군부이며,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북한의 군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체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군부라는 점이다. 「하나의 조선」정책을 실천하려 하면 할수록 체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군부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부는 「하나의 조선」정책의 지속적인 「지지」나 혹은 역으로 「하나의 조선」정책의 「수정」을 중심하여 볼 때에 이중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의 조선」정책을 지지할 경우, 북한체제의 딜레마가 악화되며 이에서 기인하는 「위기」는 북한의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하려 할 경우, 북한의 체제적인 측면에서의 「혁명적」인 변동을 경험해야한다는 「군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정치변동의 핵심적인 요인은 북한이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에서 기인하는 북한 「군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조선」정책의 「수정」은 북한의 체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군부의 「군사적」 성격이 「정치적」 성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민군은 「당의 무장력」으로서 종속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부가 당에 우월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29) 「하나의 조선」정책에 관하여는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대회 개정 북한 노동당규약 서문을 참조할 것.

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아마도 군부에 의한 남한의 「5.16혁명」과 흡사한 역사적인 「수정」을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군부의 동태를 예측하는 데에 남한의 「5.16혁명」이 대칭적인 경우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된다는 이유인 것이다.

V. 「김일성 이후」 북한의 위기와 군부의 입장

「김일성 이후」의 북한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북한 군부가 취할 태도는 당면한 문제중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가 북한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취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개념은 「무력통일」이라는 문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남한내에서는 그 어떤 반응이나 이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탈냉전 이후 혹은 특히 문민정부 이후 자연스럽게도 안전보장이라는 문제가 경시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북한의 위기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기」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북한의 안전보장이라는 문제는 보다 한층 「날카롭게」(Acute) 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조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북한의 체제적인 위기에서 가장 이를 실감하는 것은 역시 북한의 군부인 것이다. 북한의 체제적인 기초는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부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부가 정치심리적으로 「배수의 진」을 칠 때에는 「무력통일」이라는 것으로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두 가지의 기본점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 군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대남공작」이며, 또 하나는 「대남군사정책」이다. 예측적인 관점에서 북한군부의 동태라고 말할 때에는 「대남공작」과 「대남군사정책」 모두를 전제하면서 평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남군사정책」에 대한 분석은 범위 밖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보다 정치적 성격의 「대남공작」을 중심으로 군부의 태도와 관련시키면서 전망적인 예측을 한다.

「대남공작」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은 급격하게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의 목적은 「사보타주」라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강화되어 왔다고 본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중장기적인 공작으로부터 「단기 공작」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본다. 「단기 공작」의 성격은 「직접적」이며,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띠는 공작이라고 전망된다.³⁰⁾

북한의 군부의 동태에 대한 예측에서 「김일성 이후」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과 방법에서 북한이 「배수의 진」을 칠 경우와 남한이 능숙하게 북한의 위기를 대처하지 못할 때, 즉 남한의 대북한 정책의 약점을 체제적으로 노출시킬 때에는 북한은 상습적으로 대담한 대남공격을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정치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군부가 극도의 위기감을 느낄 때에는 북한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남공격을 가할 경우를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의 군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때에는 「손해볼 것 없다」는 전제하에 대담한 대남공격을 가할 태도와 결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예측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군부의 태도는 북한의 「위기」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본다. 「위기」의 성격이 「배수의 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진전할 경우, 북한의 정책적인 대처에서 「더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인 것이다. 이에서 기인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는 공격적인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북한 군부의 압력과 주장은 북한의 위기 대처에 크게 작용하리라 볼 수 있는 것이다.³¹⁾

사실상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5년을

30)최근 모우방적인 국가의 첩보기관에서는 북한의 대남공작원의 남한 침투의 성격이 과거 중장기로 민간인을 훈련시켰던 것과는 달리, 북한의 인민군 장교들이 직접 침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1994년 1월).

31)Bradley K. Martin, "Intruding on the Hermit Kingdom: Glimpses of North Korea" (East-West Center, Special Report, 1993) 참조. Edward Neilan, "The Next Coup d'Etat" (July 31, 1993) 참조.

기하여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을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김일성의 「대전략」에 있어 예측되었던 바로서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 초청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남 「평화공세」를 동시에 전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김일성의 「대전략」은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무덤속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김정일의 대남정책의 자료는 「전술적」으로 서류화된 자료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류화된 자료」는 전략적인 것이 아니며 「전술적」인 것이라고 할 때에, 특히 북한의 과도기적인 정치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위험한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김일성의 「대전략」 없는 「전술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은 특히, 군부가 개입할 경우에는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본다.

「김일성 사망 이후」 혹은 새로운 김정일 집권 이후에 있어 북한 군부의 발언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대전략」 없이 「전술적」인 대남정책만이 우세하게 전개될 때에는 군부의 발언권은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기시에 정치적 제어가 없을 때에는 군부의 강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Ⅶ. 북한 체제변동과 한반도의 장래 - 「동서독형」과 「유고형」

북한의 정치변동과 군부와의 관계를 논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반도의 향방에 참고가 되는 범주화는 그 하나가 「동서독형」의 해결이며, 또 하나가 「유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현상 이후 혹은 탈냉전 이후라는 관점과 국가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나아가는 개념을 「동서독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는 역으로 「해체국가」(Failed State)형으로 나아가는 것을 「유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국가」라는 개념은 탈냉전 이후 대내적인 「혼란」을 기원으로 하여 국가체제로서의 형식과 내용이 붕괴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내전이나 국내분쟁이 장기화함으로써 통치의 기본 능력이 마비되고 국가 자체가

위기 극복이 불투명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아가서 국가기구의 해체과정을 겪게되는 것이다. 이를 「해체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해체국가」에 속하는 나라로서는 물론 첫째가 소연방, 동독, 유고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과 「전쟁의 종결」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동서독형」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 아니다. 여기에 한반도의 정치전망의 복잡성과 이에서 기인하는 「위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서 보다 가까운 길은 「동서독형」이라기 보다는 「유고형」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형이라기 보다는 해체적인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고형」으로 갈 가능성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전장에서 상술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딜레마이며, 이에서 기인할 북한의 해체국가로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문제인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주도해야 할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를 끌고 가기는 커녕, 탈냉전 이후의 남한의 정치가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대내정치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는 북한 그 자체가 이미 「해체국가」로서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변경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해체국가로서의 과정을 거칠 때에 이의 「혼란」과 「위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남한이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 「해체국가」로서의 과정을 거칠 때에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큰 동요를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해체국가로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군부의 동향인 것이다. 이유는 북한이 「해체국가」로 나아갈 때에 가장 「저항」할 북한의 대내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이 「해체국가」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에서 대내정치상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정치적 세력은 북한의 군부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해체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한반도의 위기」인 것이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위기를 낳을 것이며

북한의 군부가 그의 태도를 결정해야할 단계에서 기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군부에 의한 「군사혁명」(Coup d'Etat)이 문제될 것이며, 북한 체제변동의 본질적인 변화가 전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